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독교인의 과제와 역할 :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허문영 (통일연구원)

I. 지속되는 한반도 위기

지난 2월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동북아시대를 천명하고, 새 역사의 도정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이 같은 시대를 열기 위해 '참여정부'의 기치 하에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포함한 12대 국정과제도 제시하였다.¹⁾ 그러나 '참여정부'는 2002년 10월에 제기된 북한의 핵무기개발의혹 문제로 인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 핵문제는 1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물론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기 위한 노력도 있었다. 중국이 중재하는 가운데 북한과 미국이 만나는 3자회담(4. 23-25: 베이징)이 개최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한국·일본·러시아가 포함된 확대6자회담이(8.27-29, 베이징)이 개최되었다. 또한 남·북·한은 제10차~12차 남북장관급회담(4.27-29, 평양/ 7.9-12, 서울)을 통해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지난 10월 20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대북 5자안전보장의 문서화'원칙을 밝힌 이후, 북한 외무성대변인은 '서면불가침담보'를 고려할 용의가 있음으로 응답(10.25)하였다. 나아가 미국이 대북 공격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전쟁수행준비를 하는데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걸리고, 2004년 초 미국은 대선체제로 들어서야 하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공격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²⁾

그러나 한반도 위기는 지속되고 있고,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과 북한의 상호 강경정책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풀어 나가되, 미국 의도대로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선제공격³⁾도 감행하려는 의도를 감추지 않은 바 있다.⁴⁾ 북한 또한 이렇게 될 경우,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지만 않을 것임

1) <http://www.president.go.kr/warp/kr/president/vision/>

2) 한국 국방연구원 문광건 박사,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Joel Witt 「대한매일」, 2003.4.15.

3)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ptember 17, 2002.

4) 「조선일보」, 2003.2.26.; “미, 미사일추적함 북 근접배치, 합참의장 선제공격 계획있다”2003.3.1.; 「한겨레」, 2003.2.20. “미, 북 핵시설 고강도 폭격도 검토” Nicholas Kristof, *New York Times*, 2003.2.28. “ 딉 체니 미 부통령, 북한에 대한 무력행사 가능성 시사” *Los Angeles Times*, 2003.3.23. 「산케이 신문」, 2003.4.11.

과 자위적 차원에서 핵무기개발을 지속할 것임⁵⁾을 천명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의 불타협 자세와 북한의 확고한 핵무기 보유욕 그리고 남한의 안보의식 해이와 위기감 부재로 인하여 한반도가 3각폭풍 중첩화에 따른 '절대 폭풍'(perfect storm)에 진입중이라는 경고가 미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⁶⁾ 이후 계속해서 미국 전문가들이 전쟁우려의 발언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⁷⁾ 심지어 구체적 연도인 2004년 및 2007년 한반도 전쟁예언설 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국내적으로는 남북공동행사 및 이라크 파병문제로 인해 보·혁갈등이 심화되고 있다.⁸⁾ 2003년 3·1절에는 57년 만에 다시 '갈라진 행사'가 개최되었고,⁹⁾ 4.19에는 '반핵 반김 자유통일 청년대회'와 '민족자주 반전 평화 촛불행진'이,¹⁰⁾ 8.15에는 집권당 사무총장은 평양으로 야당 대표는 길거리로 나갔고, 3년째 보수·진보 단체들에 의해 '반핵 반김 국민대회'와 '반전평화 통일대행진' 등 '남남갈등'의 대규모 도심 집회가 반복되었다.¹¹⁾ 북한을 협상대상으로 보는 시각과 정복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의 이라크 추가파병 요청(9.5) 있자, 파병 반대론과 파병찬성론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교계마저도 이를 부추기는 우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 정세가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대신, 이렇게 위기와 갈등국면으로 치닫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를 평화적으로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

5) 최근 북한은 외무성대변인 발표를 통해 이미 이 같은 시사적 행위를 전개하고 있다.

- “우리의 핵억제력 강화는 때가 되면 실물로 증명,”(10.18)
- “때가 되면 우리의 핵억제력을 물리적으로 공개,” (10.16)
- “8000여대의 폐연료봉 재처리 성과적으로 끝냈다,”(10.2)¹⁾
- “미국의 핵선제공격 막는 핵억제력 강화의 실제적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 (9.29)

4)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 (SAIS) 돈 오버도퍼(Don Oberdorfer) 교수, 「조선일보」, 2003.5.3.

7) William Perry, “미국과 북한은 전쟁을 향해 떠내려가고 있다. 빠르면 금년 내에 일어날 수도 있다.” *Washington Post*, 2003.7.15.; Larry Nicsh, “한반도 주변 7~10월 위험한 시기,” *Far Eastern Economic Review*, 2003.7.17.; “미, 북 붕괴시킬 군사작전안 마련,” *US News and World Report*, 2003.7.21.

8) 예컨대 대북 및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유시민연대·재향군인회 대 통일연대·전국민중연대 간의 갈등이, NEIS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국교총 대 전교조 간의 갈등이, 대법관 제청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대 소장판사·시민단체간의 마찰이, 학생운동과 관련해서는 젊은보수모임 대 한총련간의 갈등 등을 들 수 있다. 「매일경제」, 2003.8.15.

9) 광복 후 처음 맞은 1946년 3·1절 행사도 좌익과 우익으로 갈라져 기념식을 따로 가진바 있다.

10) ‘4.19집회 보수 따로 진보 따로,’ 「중앙일보」, 2003.4.21; ‘또 따로 집회, 서글픈 4.19’ 「조선일보」, 2003.4.21.

11) “남남갈등의 날’ 돼버린 8·15,’ 「한국일보」, 2003.8.16.

II. 현안 : 미국 세계패권전략과 북한 생존전략의 충돌

얼핏 보면, 최근 한반도 위기 상황은 북한의 핵개발 문제로 인해 초래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 위기상황을 북핵 문제로 이해하는 한, 위기상황은 쉽게 풀리지 않을 수 있다. 북핵 문제를 단순히 북한의 핵 문제로 이해하는 한, 북핵 문제는 풀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자면, 북핵 문제는 한반도 위기상황에 있어서 현상의 문제이지, 본질의 문제는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반도 위기상황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변화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의 연장선상에서 보아야 하며, 특히 21세기 유일초강국으로 자리매김을 한 미국과 강성대국을 주창한 북한의 입장과 전략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1. 미국 : 유일 초강국 또는 전지구 제국(Global Empire)

소련의 해체로 인해 미국은 탈냉전시대 유일 초강국으로 남게 되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미국은 20세기 패권국(Hegemony)을 넘어서, 경제적 거래까지 통제하는 21세기 전지구 제국¹²⁾으로 까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¹³⁾ 물론 이같은 미국이 영국과 같은 단기 제국으로 끝날지, 로마같은 장기 제국으로 지속될 지는 좀 더 두고 봐야하겠 다.¹⁴⁾ 다만 우리로서는 20세기 미완성 과제이자, 민족의 숙원인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21세기에는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 미국의 이 같은 절대 강력화 흐름을 잘 이해하고 대처해야 한다.

최근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특징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부시 행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정책을 더욱 강하게 추구하고 있다. 역대 미국의 대외정책은 국제평화를 위해 힘을 강조하는 공화당과 대화를 강조하는 민주당에 의해 추진되어 왔다. 민주당원인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미국은 힘보다는 대화에 의한 평화를 선호하였다. 이같은 입장이 대북정책에도 반영되어 미국은 올브라이트 국무 장관을 북한에 파견하는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대화와 협상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가까스로 대선에서 이긴 공화당 부시 행정부는 ABC (Anything But Clinton)정책을 강조하는 가운데 9.11 테러사건을 겪으면서 더욱 강경한 힘의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2) Joshua. S. Goldstein은 자유주의자들이 선호하는 패권과 중상주의자들이 선호하는 제국의 차이점을 경제적 거래 통제 시도 여부로 구분한다. 김연각 외 역, 「국제관계의 이해」(서울: 인간사랑, 2002), p. 393.

13) 사실 오늘의 미국은 퓨리턴들이 시작한 미국과 국가성격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거칠게 말하자면, 식민지→ 독립국→ 통합국→대륙(지역패권)국→패권국→전지구 제국으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권용립, 「미국의 정치 문명」(서울: 삼인, 2003) 참조,

14) 엠마누엘 토드, 주경철 역, 「제국의 몰락」(서울: 까치, 2003) ;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김명섭 역, (서울: 삼인, 2001), 참조

둘째, 미국은 대북 강경정책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좌절시키는 한편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패권을 지속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탈냉전기 유일초강국인 미국은 9.11 테러이후 북한의 미사일 및 핵탄두 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대량살상무기가 중동 테러집단으로 연계되는 것을 막으려 한다. 동시에 미국은 미국이 주도하지 않는 동북아 지역질서 재편에 대해서도 매우 소극적 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적대 갈등관계에서 화해 협력관계로 전환하기 시작하였고, 북한의 대중국 및 러시아 정상외교 나아가 2002년 9월 북일 정상회담으로 동북아 질서 재편조짐이 일어나자 부시행정부는 10월 켈리특사의 방북을 통해 북한의 농축우라늄 핵개발 의혹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같은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은 1990년대 초반 아버지 부시행정부에 의해 추진된 대북정책을 연상시킨다. 당시 8차에 걸쳐 진행된 남북고위급회담과 북일 국교정상화회담은 탈냉전 분위기에 부응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 질서재편의 계기를 만들 수 있었으나, 미국이 제기한 북한의 플루토늄 핵무기개발의혹에 대한 특별사찰 요구로 결렬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셋째, 근본주의적 성전론자(Fundermentalistic Crusader)¹⁵⁾에 가까운 부시대통령이 ‘불량국가’(Rogue State)·‘악의 축’(Axis of Evil) 또는 ‘무법국가’(Outlaw State)인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붕괴(regime change)되는 것을 적극 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¹⁶⁾ 21세기 인류의 공적인 테러와의 전쟁전략 차원에서 그 배후 테러지원국인 북한을 제재하고, 북한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김정일 정권을 전복시키는 것은 인류의 정의와 하나님의 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부시 대통령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북한

그러면 핵무기개발계획¹⁷⁾을 시인한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가?

첫째, 북한은 농축우라늄 핵개발 계획과 플루토늄 핵무기 보유의혹을 대미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용으로 일단 활용하되, 정권유지 차원에서 실제적으로 개발 및 보유하고

15) 조셉 L. 알렌, 김홍규 역, 「기독교인은 전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16) ‘일본 시사주간지 사피오가 전하는 미국의 김정일제거 극비 시나리오’ 「월간 중앙」 2003. ; ‘중국 새 지도부는 북한의 김정일을 버릴 것인가」 「월간 조선」, 2003.6. ; ‘김정일 스위스 망명 공작」 「월간 조선」, 2003.8 ; ‘난기류에 빠진 북중관계」 「월간 중앙」, 2003.8

17) 국가들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일반적 동기는 크게 다섯가지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이 모델들을 다 적용할 수 있다. ①안보 모델: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국가안보차원에서 군사력 증강 ② 국내정치 모델: 국내 정치적 기반 강화와 리더십 과시를 통한 정권안보차원에서 핵무기 개발 ③ 상징 모델: 지역적 역할 증대 및 강대국 관심 유도 차원에서 핵무기 개발 ④ 경제 모델: 상대적 영가의 방위력 확보와 무기수입 대체 및 무기수출 증대를 통한 국제수지 개선차원에서 개발 ⑤ 협상 모델: 핵강대국으로부터 체제 보장 및 정치·경제·안보적 실익 확보차원에서 핵무기 개발 시도. 허문영, 「북한의 핵개발계획 인정과 우리의 정책방향」(통일연구원, 2002), pp. 33~35.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김정일 정권의 장기 유지를 위해 경제난과 안보난을 반드시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중심고리'적 과제임을 확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은 부시 행정부로부터 체제보장을 받아내기 위해 2003년 경수로발전소 완공지연(계획목표의 30%)과 미사일 발사동결 해제문제를 중심으로 큰 담판을 준비해왔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패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김정일 정권 붕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 정권유지를 위한 최후 보루 확보차원에서 핵무기 개발을 실제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둘째, 북한은 단기적으로 체제유지에 주력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공산화통일을 추진할 수 있다. 북한의 국가목표는 체제유지와 공산화통일 2가지이며, 상황에 따라 그 우선순위와 비중이 변하였다. 그리고 이른바 3대혁명역량(국제정세/남한정세/북한정세)이 전반적 약화된 현 상황에서는 '강성대국 건설'을 표방하며 체제유지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발전적 변화가 없이 경제난과 안보난이 해결될 경우, 북한은 다시 공산화통일에 주력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북핵 위기는 대이라크전의 성공적 추진과 더불어 동북아에서 패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략과 2003년 대미협상을 통해 정권유지 및 공산화통일 기반을 구축하려는 북한의 전략이 충돌한 것이라 하겠다. 미국의 세계패권전략과 북한의 생존전략의 충돌이 최근 한반도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Ⅲ. 한반도문제의 특징: 이중성

북핵 문제만 해결되면 한반도 위기는 해결되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도 쉽게 이룩할 수 있는 것인가? 한반도 문제는 북핵문제와 같은 현상적 문제뿐만 아니라, 이중성이라는 본질적 문제와도 연계되어 있다. 이 이중성은 상황의 이중성과 구조의 이중성으로 나뉘 볼 수 있다. 한반도 통일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이 같은 이중성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상황의 이중성 : 전환기

상황의 이중성이란 통일문제에 탈냉전 조류와 냉전적 관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세계적 차원에서 볼 때, 이데올로기 대립에 기초한 미·소 중심의 냉전적 진영대결은 소련의 해체와 동구사회주의 진영의 붕괴로 인해 정녕 종식되었다. 그러나 한반도를 위요한 동북아 지역적 차원에서 볼 때, '21세기 사회주의 대국'으로의 도약을 꿈꾸는 중국과 강성대국 건설을 주창하는 '우리식 사회주의 국가' 또는 '수령제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의 존재는 아직도 동북아에서 자유민주주의 대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 대결이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따라서 냉전의 20세기가 끝나고, 탈냉전의 21세기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세계의 중심축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이 같은 시대적 변화와 상관없이 아직도 냉전의 고도로 남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그러므로 21세기 민족의 도약과 발전을 꿈꾸는 우리로서는 시대착오적인 냉전적 인식만을 고집할 것도 아니나, 상황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탈냉전적 주장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문명사적 흐름과 민족사적 소명에 대해서도 민감한 자세를 갖추고 통일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또한 '극단의 세기(the Age of Extremes)'인 20세기 시대정신과 한국전쟁의 경험 그리고 21세기 초입에 벌어진 9·11 테러도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는 미·소 대결의 양극적 냉전체제하에서 동족상잔을 경험하고, 이후 분단상황 속에서 극단적 대결을 겪으면서 살아왔다. 따라서 '우리'라는 틀 속에서 다양한 입장들을 배려하는 균형적인 인식보다는 '나와 너'라는 틀 속에서 생존을 위한 편가르기식의 극단적인 인식에 익숙해져 왔다. 게다가 9·11 테러사건 이후 우리의 동맹국가인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북한을 이라크·이란과 함께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규정하자, 우리의 북한에 대한 극단적 인식이 다시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2. 구조의 이중성 : 자주의식 고양과 주변 4국의 영향력 확대경쟁의 충돌

첫째, 한반도 통일문제는 민족문제이자 국제문제이다. 한반도문제는 남북한이 주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민족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4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잇는 국제문제적 성격 또한 지니고 있다. 우리로서는 한반도문제를 19세기 모든 국가들의 과제였던 '근대적 민족국가 건설(modern nation-state building)' 목표를 뒤늦게나마 달성하고, 통일되고 독립된 나라로 발전시켜 21세기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또는 '세계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한민족문제로 간주한다.

그러나 미국은 21세기 유일초강국 지위 지속적 확보차원에서, 중국은 21세기 사회주의 대국과 아시아 지역패권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 확보차원에서, 일본은 21세기 세계일류대국으로의 자리매김을 위하여, 러시아는 시베리아 개발을 통한 초일류대국으로의 재도약을 위하여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하여 민감한 관심을 갖고,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 재편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이 한반도 통일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통일문제에 대한 국제적 영향력이 증대하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될 경우 우리 민족의 의지와 상관없는 방향으로 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북한 뿐 만 아니라 주변 4국과도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한반도 문제는 현상유지의 문제이자 현상타파의 문제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즉 4300만 한국 국민의 안보를 지켜야 하는 현상유지적 성격과 7500만 한민족의 평

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해야 하는 현상타파적 이중적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한 평화지키기(peace keeping)와 화해협력을 통한 평화만들기(peace making)를 병행하되, 평화지키기가 우선적 과제임을 분명히 해야한다. 그러므로 북측의 무력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 입장을 보여주되, 협력적 자세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신축적 연계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북한은 우리와 통일을 이뤄갈 동반자이나,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데올로기적 경쟁자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1993년 초 국내학술회의에서 있었던 일화이다. 당시 북한의 대남정책을 발표했던 어느 학자는 북한이 1992년 4월 9일에 개정된 헌법을 통해 공산주의 통일을 포기했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논거는 북한헌법 제5조에 규정된 공산화 통일조항이 1992년 개정헌법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날 토론자였던 필자는 개정헌법(‘92)제11조에 ‘국가는 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는 조항이 새로 삽입되었음을 지목하였다. 즉 ‘수령제 당-국가체제’인 북한에서 당 규약 전문에 적화통일 문장이 존재하고, 수령의 교시에 따라 국가방향이 바뀔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해방(분단)동이’가 59세 되었음을 생각해야 한다. 오늘날 북한에서 사람들의 대다수가 태어나기 전부터 공산주의를 사랑해서 북한에서 사는 것이 아님도 유념해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북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북한을 조국으로 여기며 살게된 사람들이 주민의 90%에 달하게 되었다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IV. 실천과제 : 균형적 인식과 전략적 사고 그리고 관용적 자세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북한을 보는 시각과 새로운 남북한 화해협력 방법을 둘러싸고, 여러 논의가 전개되었고 때로는 격렬한 논쟁도 진행되었다. 이는 새로운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한 과도적이고 민주적인 진통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국제적으로는 북한주도의 동북아 질서 재편과정에서 미국의 적극적 개입으로 인해 한반도 위기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상황과 구조의 이중성이라는 내재적 특징을 갖고 있는 한반도 통일문제를 유념하면서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1. 기본방향

첫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적 인식을 갖자.(수 1:7) 우리는 북한 및 한반도 통일문제가 분단 58년의 세월 동안 만들어진 구조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 극우 또는 극좌적 극단주의는 도움이 안됨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두 눈을 주셨으니, 두 눈을 다 활용하여 좌와 우를 함께 보아야 한다. 한 눈으로만 보면 사물의 입체감과 원근감을 상실하여 제대로 볼 수 없듯이, 북

한과 통일문제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뢰회복에 기초한 상호존중이다. 민주사회에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자유롭게 개진되고 토론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최근 일련의 보수·진보 논쟁은 우리 대북정책 방향과 속도에 대한 국민여론 수렴과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와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관용의 정신이 결여되고, 통일문제가 정략적으로 이용될 때, 자유민주주의는 훼손되고 우리 민족의 장래가 어두워지게 될 수 있다는 점도 동시에 유념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후 대두된 비판 여론 가운데 타당한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여 남북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지금 함께 사는 국민과의 화합 없이 미래에 함께 살 민족간의 화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마6:33) ‘됨’(Being)과 ‘함’(Doing)을 함께 추구하되, 먼저 ‘됨’을 소중히 여기자. 통일이란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통일국가는 적어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나라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먼저 상대방인 북한을 변화시키려고 애쓰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우리의 통제력 범위 내에 있는 우리 사회에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하자. 이런 맥락에서 IMF 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에게 음란과 부정부패와 거짓 문제를 경고하셨다. 오늘 우리사회는 어떤가? 민족의 숙원이자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한반도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의 모습을 반성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름 아닌 무너진 신뢰감을 회복하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다소 흥분된 상태에서 북핵 위기의 ‘주도적 해결’을 강조하는 가운데 대북 및 대미 특사파견을 각각 단행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및 부시 대통령을 만나지 못한 사실을 고려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주도적 해결’이라는 것이 다소 과잉의욕적 표현이었다. 북핵 위기와 관련된 북한과 미국의 입장을 배려하면서도, 한반도문제의 당사자로서 ‘적극적 노력’을 강조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서 정책을 추진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튼 북핵 위기 및 한반도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다차원적 동시 해결노력이 필요하나, 한정된 국가자원을 고려할 때, 그 수순은 先 국민화합, 中 한·미 및 국제협력, 後 남북관계 개선이 바람직하다.

셋째, 미래지향적 사고를 갖자.(사19:23~25) 세계사의 중심은 서진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4세기부터 14세기까지의 중세시대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문예부흥과 종교개혁이후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근세시대는 대서양을 중심으로 문명의 꽃을 피웠다. 그리고 21세기 태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문명 시대가 전개되

기 시작하였다. 다시 말해 태평양 인접국가들이 주고받는 무역총액이 대서양 인접국가들의 무역총액을 1996년부터 앞서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런데 한반도는 대륙의 힘이 강할 때에는 대륙의 영향력 하에 머물게 되었고, 해양의 힘이 절대적일 때에는 해양의 속국(일제의 식민지)이 되었다. 그리고 대륙과 해양의 힘이 팽팽하게 대결할 때, 한반도는 분단국(미일 대 중소 대결구도하의 남북한)으로 전락하였다. 따라서 21세기 태평양 시대에 우리 민족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접점에서 대결의 상태로 더 이상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인류의 공동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의지를 갖고 통일문제를 진취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넷째,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forgive but don't forget)(사 43:18, 46:9) 그리고 사랑하자.(롬 12:18~21) 한국전쟁과 수많은 남북 갈등의 역사에 따른 원한과 미움 그리고 증오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말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는 늘 유념하여,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2000년 5월 독일통일 10주년 한·독 워크숍에서 만난 구동독 출신 목사인 쇼어렘머(Friedrich Schorlemmer) 작센주 기독교연합회장은 분단 당시 교회가 이데올로기적 사고에 함몰되지 않고 동서독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양국을 이어주는 큰 고리 역할을 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통일과정에 대한 지혜의 조언을 부탁하자, '민주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을 증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 것과 공산주의에 대해 조심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남에 대한 증오와 두려움은 먼저 내 마음에 증오와 두려움을 심는 것이 되며, 또한 기독교인은 억압받는 사람이나 억압하는 사람 모두 자유를 찾도록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나아가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 생명으로 존재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피조물로서 구원의 대상이다. 그가 비록 이방인이든, 공산당원이든, 여타 종교인이든. 이들 모두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한다. 기독교인은 이 복음을 이들에게 전해줄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리고 기근과 영양실조 및 병마로 고통 받고 죽어가고 있는 북녘동포들에게 의약품과 식량 원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자.

다섯째, 한반도평화를 위해 기도하자. (시122:6) 평양은 일찍이 암울하던 일제하 식민 시대에 놀라운 영적부흥으로 인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일컬어진 바 있다. 그 '예루살렘' 평양과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심지어는 '1~2개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이다. 그리고 미국은 이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선제공격'을 적극 검토해야 하고, 나아가 감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그러면 한반도문제의 당사자이자 북핵 위기의 실제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우리가, 특히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주님은 평안을 구하라 하셨다.

평안(peace: shalom)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shalom)은 비폭력(상황)과 정의 및 공의(구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존재)의 3가지 특성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북한은 폭력적일 뿐만 아니라 대량살상 무기인 핵무기를 개발해서는 안된다. 동시에 북

한을 공격하는 전쟁도 없어야 한다. 그리고 북핵 위기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일방적 억압이나 누름에 의해 해결되어서는 안되고, 억울한 나라가 있어서도 안된다. 나아가 북한은 체제전복 지향적 북음사역에 대해서는 주권적 차원에서 대항할 수 있으나, 체제발전적 북음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수용 태도를 취해야 한다. 지금은 북핵 위기를 민족 공동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다. 그리고 한반도 문제를 단숨에 풀 수 있는 길은 없다. 다만 주님 안에서 우리의 진실함과 꾸준함만이 그 해법이 될 것이다.

2. 세부 실천방안

가. 대내정책 : 북핵위기 관련, 평화지향적 국민화합 추구

첫째, 여야는 대북정책과 관련, 기본틀과 방향을 반드시 합의하여 국민 불안감을 해소시켜주어야 한다. 여당은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대한 독점의식을 버리고, 역대 정부에서 시작된 화해협력정책의 기초와 성과를 인정함으로써 국민적 지지를 확충해야 한다. 야당 또한 그 문제점은 비판적으로 지적하되, 화해협력정책이 21세기 한민족 생존과 통일 그리고 번영을 위한 방향임은 인정해야 한다.

둘째, 국내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화합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확산시키는 것이 요청된다. 북한에는 아직도 공산화통일을 지향하는 300만 공산당원과 130만 붉은군대가 있으나, 동시에 분단 이후 태어난 세대가 전체주민의 90%에 달한다. 따라서 북한의 '적'과 '동반자'의 이중적 특성을 균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 이를 위해 북한의 조기변화론, 변화낙관론 등을 유포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셋째, 대북 협상과정과 관련해서는 북한에게 끌려가는 인상을 국민에게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시간과 국력은 북측이 아닌 우리 편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북한으로 하여금 오판이나 실기하지 않도록 우리 정부는 북한 핵개발을 조금도 용납할 수 없으며, 핵포기 없는 남북관계개선은 불가능하다는 단호하고 명백한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

넷째, 통일정책 추진체계를 잘 세워야 한다. 국민의 정부 햇볕정책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보다는 소수 인원에 의해 추진된다는 소문이 남으로써 상당수 지식인들의 비판과 이반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2000년 4월 총선 직전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하고, 금강산관광 및 대북 지원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자, 국민의정부도 대북정책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높은 것으로 의심받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특검이 실시되고, 절차 및 내용상의 심각한 문제점이 밝혀지면서 정몽헌회장의 자살과 더불어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정당성마저 훼손되었다. 노무현 참여정부하에서도 '안보현안의 기획·조정자'인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안보정책 집행의 핵심'인

국방부가 국방비전의 핵심원칙인 '자주국방론'의 실행방안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¹⁸⁾

다섯째, 최근 국내사회에서 점차 확산되기 시작한 반미정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반미도 문제가 있으나, 친미 회귀 주장도 21세기 한민족 발전전략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한미관계에서 한국의 주체적 위상을 확보하되, 미국의 세계전략과 위상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양측 모두 실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아무튼 지금 이 시점에서 국내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뢰회복에 기초한 상호 존중이다. 민주사회에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자유롭게 개진되고 토론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최근 일련의 보수·진보 논쟁은 우리 대북정책 방향과 속도에 대한 국민여론 수렴과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와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관용의 정신이 결여되고, 통일문제가 정략적으로 이용될 때, 자유민주주의는 훼손되고 우리 민족의 장래가 어두워지게 될 수 있다는 점도 동시에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이후 대두된 비판 여론 가운데 타당한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여 남북대화과 6자회담에 임해야 한다. 지금 함께 사는 국민과의 화합 없이 미래에 함께 살 동족 및 타민족과의 화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나. 대외정책 : 한·미 및 대외 신뢰회복과 향후 정책협력 적극 모색

첫째, 대외관계에서 우리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름 아닌 무너진 신뢰감을 회복하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다소 흥분된 상태에서 북핵 위기의 '주도적 해결'을 강조하는 가운데 대북 및 대미 특사단을 파견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및 부시 대통령을 만나지 못한 사실을 고려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주도적 해결'이라는 것이 다소 과잉의욕적 표현이었다. 북핵 위기와 관련된 북한과 미국의 입장을 배려하면서도, 한반도문제의 당사자로서 '적극적(건설적) 노력'을 강조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서 정책을 추진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튼 북핵 위기 및 한반도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다차원적 동시 해결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한정된 국가자원을 고려할 때, 그 수순은 先 국민화합, 中 한·미¹⁹⁾ 및 국제협력, 後 남북관계 개선이 바람직하다.

둘째,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에 있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공통점과 보완점을 중심으로 양국관계를 돈독히 한다. 따라서 한·미간 마찰이 있는 부분도

18) '국방부·NSC 파워게임에 안보전선 비상등' 「신동아」, 2003.8.

<http://www.donga.com/docs/magazine>

19) 예컨대 한·미간의 신뢰구축과 정책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뤄질 경우,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는 남북한 모두 전진 배치되어 있는 전투병력 일부를 후진 배치하는 긴장완화용 카드로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미 정책적 갈등 상황이 전해지면서, 미국의 북한 제한선제공격의 신호탄으로 해석됨으로써 한반도 긴장수위가 오히려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존재함을 솔직히 인정한다. 그리고 미국과 의제 및 역할 분담을 적극 협의한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과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표출하되, 과도한 부담을 떠맡지 않도록 유의한다. 1994년 북핵 문제 해결과정에서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경수로 건설의 70% 이상을 우리가 부담하게 된 과정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 논평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해 비판적 태도는 절대로 공개언론을 통해 표출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자율성 문제, 동맹 강화 문제, 사안별 공조 문제에 있어서도 차이점이 지나치게 부각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본토피격이라는 전대미문의 9.11테러사건으로 인해 안보위기감 속에 테러국가에 대한 선제공격도 불사하려는 미국의 입장을 잘 헤아려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가 '김정일정권 교체(regime change)'가 아닌 핵 및 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무기의 제거 그리고 세계전략 차원에서 동북아에서의 패권유지로 국한될 수 있도록 대미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도 핵개발 위협이 외교적 협상용으로 국한되어야지, 군사적 수단이 되어서는 민족적 불행의 단초가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전해야 한다. 그리고 김정일정권의 근본적 고민인 경제난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넷째, 여타 주변 3국과의 관계설정에도 항상 유념하도록 한다. 한·미 공조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중국 및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북한의 핵무기개발 및 무장을 원치 않는 점을 십분 활용, 대북 핵개발 저지를 위한 정책적 협력을 적극 모색한다.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정책적 협조를 원활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다. 대북정책 :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화해협력과 평화공존 정책 병행 추진

첫째, '평화·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기본목표 아래 '당장의 통일을 추구하기 보다 상호위협을 해소하고, 화해 협력을 통해 공존공영을 추구'한다는 햇볕정책의 기조는 그대로 지속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김정일 정권의 안정화'를 위해 경제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규모의 대북경제 지원을 과감하게 확대한다. 그 대신 반대급부로 북한 군부에게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이행을 적극 요구하여, 단기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정착기반을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경제력 강화가 체제방어용이 아닌 적화통일을 위한 군사력 강화로 전이되지 않도록 보장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한민족 경제발전 전략'과 '한반도 평화방안'을 남북한이 함께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둘째,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의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정립·천명한다. 남북합의에 따른 각급 수준의 당국간 회담 및 각종 합의 사항 이행을 진행하여 남북관계와 대북 포용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되, 우리 정부는 장관급회담 등 각급 수준의

회의에서 북측에 대해 핵문제 해결이 북한의 미·일 등 서방과의 관계 개선 또는 확대, 경제회복을 위한 외부 자원 확보, 북한의 체제 안전문제 등의 관건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지시킨다. 북한 핵문제 해결이 없이는 정부간 남북관계 진전에 한계가 있으며, 북·미관계 진전 없는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 요구 실현이 불가능함을 설득한다. 또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분리 활용 전략은 남북관계의 지속성 문제를 야기할 것임을 강력하게 주지시킨다.

셋째, 핵문제 해결과 남북협력사업을 병행 추진한다. 대화과정에서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특구지정 및 육로 관광, 임진강 수해방지 대책,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설치 등 합의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그러나 북한이 의사(擬似)협상관을 고집하면서 대화를 진행할 때는 우리도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실질적 합의성과가 예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짝사랑의 대화만을 강조하는 태도는 안팎으로 참여정부에 대한 불신만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대화의 실제적 필요성에 의해 진의(眞意)협상관에 기초한 대화를 제의해 올 경우에는 보다 성과있는 대화가 될 수 있도록 대화 환경을 조성해야 하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형식적 제의에 불과할 경우에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유념한다.

V. 맺음말

참여정부는 잘해보려는 적극적 자세와 의욕이 넘쳐 초기에는 다소 시행착오를 겪었으나, 대미·일·중 정상회담과 남북장관급회담을 성공적으로 진행시켜 위기국면으로 치닫던 한반도 정세를 일단 완화시켰다. 이제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참여정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문제에 대한 공통된 국민적 인식기반을 조성하고, 정권 아닌 국가와 민족적 차원에서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우선순위를 잘 세워 추진하여 평화통일의 초석을 다짐으로써 명실상부한 참여정부가 되어야 한다.

또한 21세기 태평양 시대에 우리 민족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접점에서 대결의 상태로 더 이상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 할 뿐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인류의 공동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의지를 갖고 통일문제를 진취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도 북핵 문제와 한반도 위기상황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민족공동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 보다 노력해야 할 때 이다.

엷키고 설킨 한반도 문제를 단숨에 풀 수 있는 묘책은 없다. 다만 우리 국민의 균형적 인식과 관용적 자세 그리고 전략적 사고에 기초한 성숙한 태도, 그리고 진실함과 꾸준함 만이 그 해법이 될 것이다.

<표 1> 2003~4년 북·미 관계 시나리오

미국 / 북한		수용 (Bandwagoning)	반발 (Balancing)
유연 (Hegemony)	체제 보장	전면 관계개선 (북 핵포기)	
	불량국가 (rogue state) 지정 지속		북핵위기 지속 및 악화
강경 (Regime Change)		先 타결, 後 지지부진	戰爭

< 한반도 평화를 위해 관련국이 양자차원에서 해야 할 일 >

- 미국 : 김정일 체제 보장 →← 북한 : 핵개발 포기
- 한국 : 대북지원 확대 →← 북한 : 군비 완화
- 중국 : 압박과 설득 →← 북한 : 지원 확대 및 관계 강화

=====

약력

현 국가안전보장회의 자문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심의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전 상임위원)
 KBS 객원해설위원 (남북한관계 및 통일분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통일선교대학 학장 (전 교학처장)
 저서 통합적인 통일과 그리스도인들의 과제(II)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3, 공저)
 통일문답(서울: 통일교육원, 2003, 공저)
 통일교육기본지침서 (서울: 통일부, 2003, 공저) 외 다수